

## 고병원성 AI 더 이상 없도록...



▲ 닭고기 소비홍보 활동

지난 2008년 5월 12일 국내에 고병원성 AI가 마지막 발생된 이후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토종닭에서 저병원성 AI가 발생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08년 늦봄 기존의 예상을 뒤엎고 철새들이 날아간 4월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양계농가는 물론 정부를 당황케 하였듯이 3,4월은 우리가 주목해야할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정부에서는 연중 상시방역체제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향후 5개년 동안 약 4~500여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예방중심의 가축위생관리체계 BPR/ISP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발방지 및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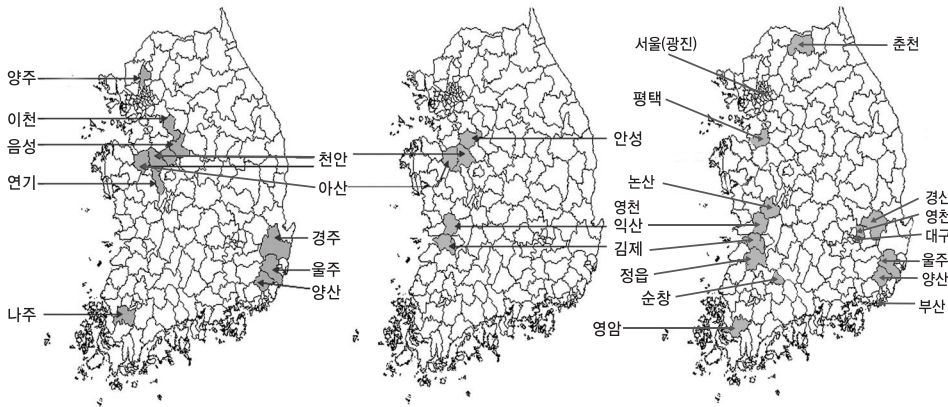
따라서 본고는 상시방역체제를 가동함에 있어 1차 발생시 3월 20일까지 발생된 점, 3차 발생시 4월 1일 첫 발생을 보여준 점에 기인하여 겨울철이 아닌 연제라도 HPAI가 우리 곁을 찾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농가방역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당시의 상황을 상기하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1. 2003 AI 발생으로 피해 속출

국내에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것은 2003년 12월 12일 충북 음성군의 한 종계장에서 폐사 등 의심사례가 접수되면서 부터이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 발원지는 충남 천안의 중오리 농장이

### 조류인플루엔자 농가 행동수칙

1.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 1588-4060, 1588-9060)에 신고
2.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
  - 계사에 철망 설치 등으로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3.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
  - 닭·오리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 공급을 받도록 할 것
    - 벌크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사료 전용 지정차량으로만 운반
  - 닭·오리 분뇨는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독만 실시
    - 부득이하게 치울 경우에도 농장외부로는 반출 금지
  - 동물약품 운반차량·관계자 농장출입 금지, 농장주가 직접 구입·운반
  - 가축운반차량(어리장차)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 닭 농가와 오리농가 상호 접촉 금지, 닭·오리 농가간 모임도 지양
4. 일반인 농장출입 통제
  - 농장 출입구에「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 부착
  -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그림1〉 1차('03/04), 2차('06/07), 3차('08) HPAI 발생 지역 분포도

있고, 계분차량 등 기계적인 전파에 의해 각지로 퍼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첫 번 경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신고에 의존하며, 끝나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102일만인 4월 20일 경기도 양주에서의 발생을 끝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10개 시군구 19개 농장에서 520만수의 닭과 오리들이 살처분되면서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바 있다. AI발생 직후 양계산물 소비는 닭고기가 80%, 계란이 40%이하로 하락하면서 전체 양계관련 업계에 타격을 주었다.

2년간 잠잠하던 고병원성 AI가 다시 찾아온 것은 2006년 11월이었다. 2004년 이후 타격을 입은 양계업계가 정상을 되찾으면서 과거 AI에 대한 악몽을 어느 정도 잊혀져갈 때였다. 양계산물 가격

표1. 연도별 HPAI 발생 현황

연도	1차('03/04)	2차('06/07)	3차(2008)
기간	'03.12.10~'04.3.20 (102일간)	'06.11.22~'07.3.6 (104일간)	'08.4.1~5.12 (42일간)
발생농장수	19개 농장	7개 농장	33개 농장
발생 지역	10개 시·군	5개 시·군	19개 시·군
살처분수	520만수	280만수	900만수
피해액	1,500억원	750억원	2,641억원

은 AI 종료 이후 1년 반 동안 사상 최고를 호기하며 그 동안의 어려움을 청산할 정도로 양계산업을 원점으로 돌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1차 발생 때 보다 농장수는 7군데로 적었으나 발생기간은 거의 비슷한 105일이 걸렸다. 피해 정도는 1차 때 보다 절반에 가까운 280만수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어 75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발생규모는 5개 시군구에 7개 농장으로 나타났다. 양계산물 소비 감소도 1차 발생 때 보다는 피해가 적은 닭고기 70%, 계란 20% 정도의 하락폭을 보여주었다.

1, 2차 발생을 통해 국내에는 겨울철에만 국한하여 AI가 발생되고 있으며, 감염원으로는 철새에 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겨울철새가 날아오는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간 AI특별 방역기간을 설정하여 방역활동을 벌여왔다.



▲ 양계장(산란계 농장) 살처분 장면

## 2. 늦봄에 찾아온 고병원성 AI

2008년 무사히 겨울을 보내고 2월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면서 정부에서는 AI방역을 위해 노력해 온 양계관련 업계와 농가들에게 장관 명의로 감사의 인사까지 띄우면서 자축의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하지만 4월 1일 전북 김제에서 AI발생 의심사례가 접수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다. 겨울 철새가 날아간 4월에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예상 밖의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20℃이상의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 두건 발생으로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는 뒤로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전국으로 퍼져 나갔고 부산, 대구, 서울 등 도심까지 AI가 확대되면서 전국민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역학조사 결과 3월 중순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HPAI가 인근 산란계농장으로 감염되고 감염된 오리와 닭들이 닭운반차량을 통해 가든 및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사태를 키운 것이다. 양계산물 소비량은 1차 발생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짧은 기간(42일)이지만 11개 시군구에서 33건의 농장발생으로 900만수의 닭과 오리를 매몰하면서 피해액만 2,641억원을 기록하였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HPAI 발생의 경제적 피해 계측” 보고서에서 따르면 당시 AI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액은 6,324억원에 이른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피해는 심각했다(그림1, 표1).

## 3. 간과한 점은 없었나!

2008년 AI발생 이후 정부가 AI발생에 대한 사전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03년 AI발생 이후 매년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동절기 AI 특별방역대책” 시행하였는데 AI 유입 위험시

기와 경로를 ‘동절기 북방철새’로 한정함으로써 이 시기 이외에 AI 방역에 공백이 발생하였다. 이는 AI가 연중 발생하는 중국 남부와 동남아 지역에서 겨울을 지낸 철새들이 봄철에 한반도를 경유하여 북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소규모의 닭·오리가 사육 또는 거래되는 재래시장(상설 및 5일장 개장)에 대한 방역관리가 미흡했고, AI발생 초기에 방역망이 통제가 안되어 AI에 감염된 가금류가 쉽게 이동하는가 하면 발생농장주들이 살처분 보상금 협의 등을 이유로 양계농가들에 몰려다니거나 방역지역을 벗어남으로써 병원체 전파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발생농장 주변에 있어 예방적 살처분을 했던 농가(시설)에서 나중에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 양성이 확인된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4. AI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정부는 고병원성 AI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2008년 8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의 ‘동절기 특별방역체계’를 ‘연중 상시 방역체계’로 전환하여 농가 신고에 의존하는 ‘수동적 예찰’에서 정부가 AI 유입 여부를 미리 검색해내는 ‘능동적 예찰’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임하고 있다. 또한 AI 초동방역능력 강화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여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AI 검진능력 제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방역능력을 선진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특히 이번 발생한 AI를 보다 쉽게 관리하기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등록 대상을 300㎡에서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였으며, 축산업 등록기준이 없는 종오리업을 신설함(금년 6월부

터 시행)으로써 AI 방역체제 구축 및 사전예방을 수월하게 하였다. 또한 도심지 AI 방역요령, 초동 방역팀 운영 등 '08년 AI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하여 「AI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도 완료하였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차량등록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AI전파의 주범으로 꼽혀온 소규모 닭 판매상에 대한 대책이 마땅히 수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든이나 상설시장에서 행해지는 '판매목적 가금류 자가도축 금지'를 위한「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의 추진이 토종닭관련 유통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 사회적, 경제적인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5개년간에 걸쳐 예방 중심의 가축위생관리체계 BPR/ISP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이는 첨단 IT기반의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확산방지를 위한 가축방역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본 시스템이 구축되면 위험지역의 사전 예방 활동은 물론 AI 발생시 정확한 주변정보를 통해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5. 차단방역으로 AI 예방을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고병원성 AI는 가금류에서 총 48개국 6,500여건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3년 동안에는 발생국가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태국(11.10), 베트남(10.30), 라오스(11.8), 인도(11.21), 방글라데시



▲ 방역초소 차단방역

(12.2), 중국(12.16), 홍콩(12.15, 2.2)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인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고병원성 AI로 인한 가금 산업계에 미친 피해가 매우 크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AI가 발생했던 사실 자체도 까맣게 잊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AI 재발방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농가 등 관련업계의 상시방역체계를 유지하여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지난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동절기가 끝난 후 느슨해지기 쉬운 차단방역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양계협회에서도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고 '발판소독조 설치 및 장화 갈아신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더 이상의 AI가 국내에 발을 못 붙이게끔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다. AI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 스스로 주기적인 소독실시, 축사로의 조류접근 방지시설 설치 등 차단방역 활동을 생활화해야 한다.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AI를 영원히 퇴출시키도록 하자.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